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韓-아세안, 부산 정상회의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

文 대통령, 부산서 국무회의

“지난 2년반 동안 진심다해 추진
亞 평화, 공동번영 미래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한-메콩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곳이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두 개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 및 ‘국민과 함께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회관에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 행사”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백범기념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3번째 현장국무회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신남방정책은 대한 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공동번영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인 셈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북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계 일각에서는 제자리걸음 중인 북미간 협상 및 남북관계로 인해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을 절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자랑을 말하자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또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릴 아세안 회의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내려갔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던가, 그게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軍, 의상·장비 등 ‘어설픈 홍보물’ 논란

국방부 페이스북서 일부사진 삭제

국방부의 자랑 욕심이 대려 군을 우습게 만드는 꼴을 낳았다. ‘2019 국군화보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최전방 수호병 윤** 일병)’ 편 일부 사진이 뒤늦게 국방부 페이스북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군 안팎에서는 ‘어설픈 자랑질이 군의 부끄러운 현실만 드러냈을 뿐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과 함께 해당 홍보물의 출연 대상자 선정을 비롯, 국방부를 비롯한 해당 실무자의 성의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온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한 네이션이 올린 ‘누가 찍은 것이냐’는 댓글에 대댓글 형태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종기의 장구류 장착이 잘못

됐다”며 “이에 잘못된 부분의 사진은 삭제를 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본지가 앞서 국방부와 육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화보 중 일부인 ‘최전방 수호병’ 편은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최전방 경계근무를 수행 중인 12사단 윤 일병의 사진과 ‘응원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글이 국방부 페이스북을 통해 11일 공개됐다.

그렇지만 윤 일병이 착용한 복장과 개인전투 장비가 올바르지 않았다. 이를 본 일부 현역 군인들과 예비역들은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지 않은 장병을 홍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형철 기자 captim@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응급실 등 보험 적용 확대

건보공단, 올 3.2조 적자 적립금 ↓

누적적립금 19.6조 → 17.4조 줄어
공단 “계획된 범위, 우려상황 아냐”
보험업계, 실손 손해율 5.6%p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예상된 적자이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기수지 적자 큰 폭 확대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9조6000억원이던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왔던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 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건강 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실손보험 적자 상관관계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전망



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2017년부터 시작되면서 실손보험은 지급보험금 감소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한 129.6%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중에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가 2019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됐고,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실손보험은 작년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도 함께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패키지 상품에서 실손보험료는 월 1~3만원이나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실손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데이터 3법 등 120개 법안 처리 속도

선거·사법제도 개편은 여전히 대립

침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사법제도 개편은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은 3개이지만, 다 처리할 수 있을지, 2건을 할 수 있을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경우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쳐져 있다”며 “(법안 합의) 진도가 늦은 상임 위원회가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부 입법 통제장치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데이터 경제 3법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

대학 비전임교수의

‘꼼수해고’는 부당

교수 3명 재심판정취소 소송 ‘승’

대학이 공개채용 절차를 이용해 비전임 교수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꼼수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숙)는 국립대인 A대학교 초빙교수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국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A대 기초교육원에서 2008~2011년부터 초빙교수로 일하다 지난해 같은 자리에 대한 공개채용에 불합격하자 대학 측 요구에 따라 행정실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2시간 뒤 사직원을 돌려받으려 간 이들에게 행정실 팀장은 이미 교무과에서 수리돼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공개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채용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 결정적 요인인 2단계 평가점수에는 구체적인 배점이나 평가 기준이 없었다”며 “원고들이 최초 채용 아래 계속 90점이 넘는 평가점수로 재임용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공개채용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